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8527
----------	------

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차규근 · 황운하 · 서왕진
김재원 · 정춘생 · 신장식
김준형 · 강경숙 · 김선민
이해민 · 박은정 · 백선희
의원(12인)

주 문

가. 모든 국민이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달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저출생 · 기후위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내에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세법 관련 법률안을 심사 · 처리한다.

나. ‘가’ 주문의 조세개혁안에는 조세개혁안의 방향과 원칙,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과 개별 세목의 세원 비중,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 등을 포함한다.

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에 속한 위원도 포함한다.

라. 특별위원회에는 조세개혁안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와 「국회법」 제43조에 따라 세법안 심사를 위하여 각각의 세법안에 대해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둔다.

마. 특별위원회는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고 세법 관련 법률안 심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8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사회,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디지털화 등 다차원적 위기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추산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2019~2050)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총지출 증가율(연 4.3%)이 총수입 증가율(연 3.3%)을 웃돌아, 2050년에 이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37.4조원, 국가채무는 GDP의 8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즉, 현재의 조세체계로는 다가올 미래의 위기와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임. 한편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감세 논의는 재정여력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지출부터 세원확대에 이르는 조세체계의 전반적인 개혁 논의가 시급한 시점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조세개혁 2021(Tax Policy Reforms 2021) 특별판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와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에 대비해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한편, 현재 국회는 중·장기적인 조세개혁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데에 급급한 상황일 뿐 아니라 단기적 현안 대응 위주의 잦은 법 개정에도 치중하고 있어, 우리 세법이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도 어려워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에 당파를 초월하여 당면한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개혁을 국회 스스로 이루기 위해 국회에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